

# 시·도 현안사업 엇박자... 본격 협상까지 넘어야 할 산 첩첩

##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 배경 및 선결과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제안은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업에 있어서 시·도 간 엇박자와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불통 상태'에 대한 갑갑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광주·전남과 비슷한 처지, 즉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등에 밀리고 있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나서면서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 갈등·마찰 이슈를 흡수하고 있는 것도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통합 협상에 전남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전남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을 제안한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상생'을 다짐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8월, 지난해 11월 단 2차례 공식적으로 만났을 뿐이다.

◇통합 논의 전에 군공항 이전 등 이슈 해법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해 현재 군공항 부지 개발 이익 중 4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국방부의 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군공항이 들어설 시·군과 주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 "사안마다 경쟁·각자도생텐 공멸뿐"

분리 34년 지났는데...반대 목소리도 1995년·2001년 무산, 상처만 남겨

전남에 공공기관을 더 집중 이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고, 궤도에 오른 빛가람혁신도시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광주시가 제시할 수 있는 안으로는 전남도와 함께 국방부를 설득해 기부대양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노력, 군공항 이전 시·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려 등이 있을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쇠락한 도심지역을 재생하려는 광주시와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광주지역 일부에서 민간공항 2021년 이전 약속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 이는 현안 및 통합 논의 자체를 중단시킬 파괴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시장의 이번 통합 제안은 광주·전남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비해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쇠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한전공대 유지, 군 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마다 정세 또는 마찰이 되풀이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통합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지역 혁신과 성장에 보다 매진



지난 2018년 8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만나 일사단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할 수 있고, 광역도시인 광주와 농어촌 중심의 전남이 다양한 연계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재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다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도가 분리된 지 34년이 지났는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는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과거 분리 및 통합 시도 과정에서 불거졌던 감정의 골을 메우면서, 상호 현

안에 대한 시각을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 수정하는 시도부터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1995년, 2001년 두 차례 통합 시도, 무산되며 상처만 남겨-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라며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고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2차례 통합이 시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전남도가 입장에서 "전남도는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3년간, 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2001년 등 2차례에 걸쳐 통합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 통합에는 사·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 의회 등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전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사·도 통합 첫 시도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허경만 전남지사 시절에 있었다. 1993년 5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남도청 이전 추진" 특별담화를 발표하자 이전부지를 두고 지역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에 허 지사는 도청 이전을 중단하고 사·도 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송연경 광주시장이 '통합 10대 불가항'까지 내세우며 허 지사의 통합 추진을 반대했다. 사·도 통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년 후인 2001년 초다.

민선 2기 광주시장에 취임한 고재우 시장이 "전남도청 이전이 유보된다면 사·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에 맞춰 광주지역 각계인사 3000여명이 '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청 이전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허 지사와 고 시장이 사·도 통합 논의를 재개했지만 결국 도청 이전이 추진되면서 마무리됐다. 이 두 차례의 통합 시도와 실패는 이후 광주·전남 간 각종 논의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며, 지금까지도 생채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2만원 통신비·추미애 아들 논란 해법...이낙연 고심

### 최고위 간담회·비공개 고위급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문제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 사태 대응 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후 대선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13일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급 간담회를 소집한 것은 물론 이날 저녁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4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다"며 "예결특위 심사에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지난 10일 "백락도 없이 끼여 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4차 추경의 무리없는 통과를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수정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도 문제다. 추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 유감 표명을 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결코 멈출 기세가 아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또 16일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 18일 원안절 합의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사실상 다음달 말까지 야당이 마음껏 공세를 제기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만큼, 이 대표로서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사태를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허용 말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적행위를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이재명 22% 이낙연 21%

### 한국갤럽 1002명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야권 대표를 두 달째 앞서며 20%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22%는 이 지사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월보다는 3%포인트 오르며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20%선을 돌파했다. 두 달 연속 1위다.

이번 조사는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에 이어 이 대표는 4%포인트 상승한 21%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이 지사보다 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각각 3%로 동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40%)가 이 지사(28%)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18%)보다 남성(25%)에서 높았다. 이 대표는 남성(20%)과 여성(21%)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렉스턴 스포츠 정통 익스트림 오프로드 Dynamic Edition 출시**

편의성과 정통 오프로드 특성을 완성시켜주는 다이내믹 에디션 사양들

- 데크 이지 오픈 & 클로즈
- 2열 시트 언더 트레이
-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1,000대 특별 한정 풀옵션급 사양 기본장착 가성비 끝판왕 티볼리 Limited Edition 출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최애편 최고급 사양들

-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 ADAS 9개
- Full LED 램프 (헤드램프/프로그래머블/라미네이션)
- 9인치 HD 내비게이션

**한가위 슈퍼 페스타** 최대 할인 9%, 무이자 60개월 기프트패키지(170만원 상당) 증정

**이벤트 온라인 낚시대회** 접수 : 9. 7. ~ 10. 5. 1등 - 렉스턴스포츠 칸 다이내믹 에디션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권 (062) : 서 광 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운암 573-8900 광주중앙 529-0003	전남권 (061)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 천 745-3666 여 수 683-1800 목포하양 285-7576 광 양 791-0071 나 주 331-1500
화 순 371-3555 장 흥 863-2600 나주시청 334-2727 영 암 473-3456 강 진 433-3100 해 남 537-3100 장 성 395-0007	단 양 383-5811 완 동 554-4545 영 광 353-9500 보 성 852-2892 서 광 양 761-8900 무 안 454-0099 고 흥 835-5050
진 도 542-5888 함 평 324-3800 여수구룡 642-1400 구 례 782-9300 곡 성 362-4400	